

일본 정부,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 정부 성장전략회의에서 논의, 중요정보 유출 방지

2021.4.13 일본경제신문

일본 정부는 12일 성장전략회의(의장: 加藤勝信 관방장관)에서 데이터센터의 국내유치를 위한 촉진책 논의를 시작했음. 국내외 사업자가 일본내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검토함.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 전력요금 등 코스트도 경쟁력을 좌우함. 대도시에 입지가 집중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국내에서 보존하는 데이터를 늘리겠다는 것임.

정부는 12일 회의에서 논점안을 제시하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와 첨단반도체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지적했음.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첨단 반도체의 생산거점이 국내에서 신설되도록 지원하는 방침도 밝혔음.

12일 회의에서 加藤씨는 「첨단 반도체의 확실한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의 분산입지를 도모한다」고 언급했음. 검토내용은 금년 여름에 책정하는 성장전략에 포함시킴.

데이터센터는 정보를 처리·보존하는 서버 등의 통신기기를 집약한 건물로서 디지털 시대의 중핵적인 인프라임. 기업의 DX 추진이나 고속통신규격 5G의 보급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증가, 데이터센터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전국에 데이터센터를 어떤 입지에 세울 것인지의 계획을 만들 예정임. 계획에 근거해서 신설하는 기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예컨대 해상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많이 발전하는 지역의 가까이에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필요한 전력을 보내는 코스트를 줄여 공급을 쉽게 하도록 함.

원격지에 보존된 데이터는 송신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자동운전과 원격조작 의료용 로봇의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전송되지 않으면 기술의 우위성이 흔들릴 수 있음.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시티의 가까이에 설치된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더라도 지연될 리스크는 줄어듦.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의 80%이상이 東京都와 大阪府에 집중해 있음. 남해 트러프(trough)대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분산화도 과제가 되고 있음.

경제산업성이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에 데이터센터가 많음. 2021년 예측에서는 중국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연 면적은 170만 평방미터이고, 그다음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각각 44만평방미터)임.

데이터센터는 기기의 냉각에 대량의 전력이 사용되어, 소비전력으로 규모를 비교하기도 함. 경산성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은 51%가 북미에서 점함.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8%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넓은 토지와 저렴한 전기요금, 건설허가 절차 등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음.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 구글 등 GAFA라 불리는 IT대기업은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대형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IT대기업은 안전성의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빌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성장전략에서 유치책을 마련, 진출을 촉진하는 목표도 있음.

국내에서는 LINE이 일부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고, 단계적으로 일본으로 이전시킬 생각을 나타내었음. 데이터센터에는 입지지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중국의 지자체가 자기의 법률에 근거해서 개시요구를 한다면 일본의 고객 데이터가 탈취될 우려도 있음.

디지털화로 정보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면에서 우위인 해외에 보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음. 정부가 적극적인 국내유치에 나서는 것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목표도 있음.

데이터센터는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어,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존할 지의 규칙이나 기준은 자세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 증설된다면 국내에서 보다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됨

